

5극 3특 국가 전략에 부합하는 예비전력 정예화

입력 2026.01.28 16:24 업데이트 2026.01.28 16:26

지금까지 예비전력은 '전시 동원 대상' '보조 또는 여유 전력'이라는 인식에 머물러 왔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로 상비병력 기반이 구조적으로 축소되는 상황에서 예비전력은 더 이상 주변 전력 개념이 돼선 안 된다. 평시에는 지역 기반 안보의 중심축, 유사시엔 국가 총력전의 핵심 전력으로 전환돼야 할 주력 자산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5극 3특 국가 성장전략'은 수도권·충청권·호남권·대경권·동남권이라는 5대 국가 성장극과 국방·첨단 산업·에너지·해양·우주 등 전략 특화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구상이다. 이는 곧 지역별 안보 임무의 차별화, 기능 중심 전력 배치, 분산 및 복원력 기반의 국가 방위체계를 요구한다. 이러한 구조에서 예비전력은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면서도 국가 비상시 즉각 활용 가능한 수단이 돼야 할 것이다. 문제는 현재의 예비전력 운용체계가 이러한 전략적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형식적 편성, 지역 산업·기반시설과 연계되지 않은 임무 설정, 획일적 훈련은 예비전력을 '존재하지만 활용되지 않는 전력'으로 만들고 있다. 이제는 시대 상황에 맞게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지역 맞춤형 예비전력 정예화가 필요하다. 5대 성장극별로 산업·지형·인구 특성을 반영한 임무형 예비전력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 항만·조선·원전·반도체·에너지 시설이 밀집한 지역에는 시설 방호 및 기반시설 복구 중심의 예비전력이, 접경 및 전략 기동축에는 기동 및 차단 중심의 예비전력이 배치돼야 한다.

둘째, '3특'과 연계된 기능형 예비전력로의 전환이다. 드론·사이버·우주·인공지능(AI)·재난대응 등 특수 영역에서 민간 전문성을 가진 예비역 인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편성·활용해야 한다. 이는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높은 경제적 국방 투자이자 민·군 융합의 실질적 모델이 될 것이다.

셋째, 과학화·상시화된 훈련체계로의 개편이다.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KCTC)형 과학화 훈련, 디지털 모의훈련, 지역 단위 상시훈련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으로 '연 1회 소집훈련'이라는 낡은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예비전력은 불러 모아 만드는 전력이 아니라 항상 준비된 상태로 존재하는 전력이어야 해서다.

'5극 3특 국가 성장전략'은 경제정책이자 안보전략이어야 한다. 그 접점에 예비전력이 있다. 예비전력을 개혁하지 않고선 국가 성장전략도, 지속가능한 국가 방위도 완성될 수 없다. 국가 경영 재설계 계획에 부합하는 인식 전환과 국방구조를 짜야 할 때다.

'5극 3특 국가 성장전략'의 완성은 예비전력 정예화가 뒷받침하게 될 것이다.



장태동 박사 국방대 예비전력연구센터장

<저작권자 © 국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